

## F1 남은 대회 어떻게 치르나

류성걸 차관 “수익사업에 국고 요구는 무책임”...지속개최 먹구름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지속 개최에 짙은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열악한 재정 형편 탓에 국비 지원 없이 대회 치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 지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지금껏 진행 상황으로 보면 F1 대회는 국가 사업이 아닌 게 확실하다”면서 “수익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서야) 공공재(公共財)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총 사업비만

5000억원이 넘고 대회가 치러지는 7년 동안 지급해야 할 로열티(개최권료)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회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 수익사업으로 진행해놓고 이제와 공공재적 성격이라며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다.

류 차관의 이날 발언은 김규욱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의 “F1 대회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F1조직위원회 주동식 본부장이 “에초 수익사업 성격으로 시작했으나 잘못된 판단이었고 타 국제행사처럼 공공재 성격이 강해 전남도 재정 지원을 전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고 답한 데 대한 반박이다.

류 차관은 “수익사업이 공공사업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면 남은 대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급이라도 솔직하게 재정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확고히했다. 류 차관은 “정부는 F1 대회가 국가 행사가 아닌 만큼 F1 경주장 애초 건설비 3400억원 가운데 민간 자본을 제외한 1760억원의 30%인 528억원을 체육시설 보조를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했고, 추가건설비 1000억원 중 200억원도 올해 예산에 반영시켰다”고 했다.

2016년까지 매년 치러지는 대회 운영비(90억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던 전남도 입장에서는 ‘혹 때려다 후 붙인’ 격이 됐다. 정부 입장에서 ‘할만큼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칫 향후 F1 대회와 관련된 정부의 예산 지원에 먹구름이 낄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적지 않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지금껏 F1 대회 예산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재정당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협의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해오라기떼의 망종한 23일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광주시 남구 칠석동에서 한 농민이 트랙터를 타고 논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다. 물이 가득 채워진 논 위에 먹이를 찾기 위해 무리지어 있는 해오라기떼가 이채롭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전남도 비위·음주운전 공무원 상급자도 처벌 연대책임 강화

전남도 공무원이 앞으로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해당 부서 상급자들도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전남도는 23일 “소속 공무원이 금품수수 등의 비위 행위나 구속될 경우 담당 부서 직속 상급자는 즉각 직위해제하고 차상급자의 경우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행사입건때 ‘불구속 기소’ 되는 경우에도 책임 유무에 따라 징계

를 내리던 기존 방침과 달리, 직근(直近) 상급자와 차상급자 등에 대해 ‘경고 또는 훈계’ 처분을 내리고 감독소홀 책임에 대해서도 형법상 처분 결과에 걸맞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지난해 21명으로 지난 2009년(16명)에 비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의 직근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회당 1점) 처리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최근 사방댐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도 소속 6급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된 뒤 공직기강 확립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박지사는 그동안 ‘실·국장도 해당 부서 직원들을 스스로 뽑아 쓰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해온데다, 연대책임을 묻는 징계 방안까지 제시되면서 인사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공무원 비리에 대해 ‘일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안도군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을 개정,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직무관련 300만원 이상 발급형 선고 시 과면 ▲공무 중 음주 추대 시 ‘정직’ 이상 등이다.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행위자는 공무원 신분을 빼앗고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 ‘세속 자치’ 언제까지

## ② 재정자립 없인 자치 없다

# 상속·양도세 등 지방세 전환 지방정부 과세권 강화해야

만성 재정 적자 정부의존 갈수록 심화

교부세·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바뀌어야

#정부부처가 다음해 예산안을 결정하는 매년 하반기가 되면 광주시 각 실과지인부터 경제부시장까지 매주 최소 1~2일은 서울에서 지낸다. 지역·현·현 등 인맥을 총 동원해 중앙부처의 ‘아는 사람’을 접대하고 부처 예산안에 지역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모든 지자체가 한결같이 ‘로비’에 나서기 때문에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로비’는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 예산안 의결까지 계속된다. 광역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간부를 부단체장으로 ‘모셔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준대 광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간부들에게 기획재정부는 물론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접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간부들은 정권교체 이후 호남인맥의 씨가 마르면서 안면이 없는 중앙부처 고위관료들과의 만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간부는 “학박이나 지연을 바탕으로 로비를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이것도 불가능하다”며 “수도권이나 영남 출신이 대부분 정부부처에 포진돼 있어 그들 지역이 예산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탄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강계두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중앙정부의 예산 따내기는 제로섬 게임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져가면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어서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 세원이 부족한 지역 실정에서 국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부시장의 말처럼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54.6%였지만 6년 만인 2011년 42.0%로 무려 12.6%가 급락했다. 이 수치는 역으로 보면 이 기간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재원이 없어 국가보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정착됐고, 이는 곧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지을 ‘기폭제’가 될 수 있으며, 사업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결정되면서 지역균형발전에도 고려보다는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국민의 부담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취약한 원인은 산업발전이 더딘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세원이 적은 것도 그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9대21이다. 하지만 이렇게 거둬들이는 국세와 지방세는 중앙부처가 49%, 지방자

치단체가 51%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세원이 적어 중앙부처에서 나눠주는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중앙부처가 쓰고 있는 49%도 독일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의 30~40%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독자적인 세원을 늘려가는 것 밖에 없다.

임영률 광주시 예산담당관은 “부동산 관련 국세의 조속한 이양이 필수적이며, 상속·증여·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과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15%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 담당관의 주장대로 이뤄질 경우 광주는 약 1800억원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배분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자치가 가능한 정도의 세원이 있는 지자체에 는 지원을 줄이고, 대신 세원 자체가 빈약한 지자체에 대한 보조를 늘리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인구나 가구 등 규모에 비례해 보조 정도를 결정하게 되면 지자체 간 ‘빈익빈부익부’를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 “웨딩” 특별가격으로 모십니다

호텔 프라도 2011 Summer Wedding Festival!

프라도 웨딩홀 고품격서비스

웨딩을 준비하는 신랑·신부님께 드리는 호텔 프라도만의 gift  
특급호텔 만의 품격있고, 아름다운 웨딩에 예비신랑·신부님을 초청합니다

- 웨딩 특전**
  - 허니문 스위트 1박, 조식 2인(웨딩전일 또는 당일)
  - 온돌 페덱스·웨딩홀 무료제공
  - 아이스카빙(얼음조각) 제공
  - 웨딩 축하케이크 제공
  - 특수 연출 서비스
  - 프라도 허니문 쿠폰 증정
- 신랑·신부님께만 드리는 프라도허니문 쿠폰**
  - 직계가족 웨딩 및 가족모임, 연회행사 10% D.C(1매)
  - 객실 이용시 40% D.C(1매)
  - 제과 전품목 20% D.C(2매)
  -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무료이용권(5매)
  -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시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시 50% D.C (단, 본인 2인에 한함)

프라도 웨딩홀 품격매뉴

구분	A set	B set
웨딩부페매뉴	30,000	33,000
	27,000	30,000

음, 주류 포함



호텔 프라도 PRADO | 예약문의 | 상담 | 062-654-6600  
www.pradohotel.co.kr

행사기간 : 2011년 6월 15일 ~ 8월 30일

